문제지

2027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논술고사 대비 모의고사 01회(인문계열)

성명	
수험번호	

문제	배점	시험 시간	답안 분량
2문제	**1000점**	**120분**	**문제별 700자±100자**

수험생 유의 사항

1. 문제지와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은 원고지 형식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 답안란에 작성합니다. 문제별 분량은 700자±100자(띄어쓰기 포함)입니다.
3. 제목을 쓰지 않으며, 답안에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4.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은 직접적인 채점 기준이 아니지만,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오류는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고, 수정할 때에는 가로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

1
400점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가), (다)에서 각각 찾아 제시하고, [A]와 [B]를 바탕으로 (나) 화자의 태도에 비추어 (다)의 ㉠을 논하시오. (700자±100자) [400점]

(가)에서 반구저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A])이/가 (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다수의 호응이 저마다의 ([B])이/가 되기 때문이다.

(가)

맹자는 사람에게 남의 불행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그릇됨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각각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 하며, 인·의·예·지라는 도덕적 덕목의 단서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단서란 이미 완성된 덕이 아니라 알맞게 기르고 넓혀야 할 시작을 뜻한다. 이러한 마음의 단서를 일상의 판단과 행동으로 넓혀 가는 과정을 확충이라 한다. 따라서 누구나 수오지심을 지녔다고 해서 저절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행위를 고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수오지심이 의로움으로 확충될 수 있다.

수오지심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다른 사람에게 들켜 체면이 손상될까 두려워하는 감정과 구별된다. 체면을 앞세우는 사람은 같은 행동도 남들이 알 때만 부끄러워하거나, 비난을 피하려고 잘못을 숨길 수 있다. 반면 도덕적 부끄러움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마땅한 기준에 어긋났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데서 생긴다. 그것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단정하는 자기혐오가 아니라, 잘못된 행위와 고쳐야 할 책임을 분명히 보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움의 확충은 사람을 주저앉히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과, 보상, 재발 방지와 같은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맹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데도 가까워지지 않거나, 사람을 다스렸는데도 질서가 잡히지 않거나, 예를 갖추었는데도 응답받지 못할 때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까닭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모두 바깥에서만 찾지 않고 자신에게 되돌려 찾는 이러한 태도를 반구저기라고 한다. 이는 모든 실패를 무조건 자신의 탓으로 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외부의 부당한 조건과 타인의 책임도 사실에 따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동기와 판단, 행동에 고칠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토론에서 상대가 설득되지 않았을 때 상대의 무지나 악의만 탓하면 자신의 불충분한 근거와 공격적인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말과 태도를 돌아보면 상대를 비판하면서도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처럼 수오지심이 잘못을 감지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면, 반구저기는 그 움직임을 자기 점검으로 이끌고 확충은 그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넓히는 과정이다. 다만 성찰이 지나친 자기비난이나 침묵으로 변하면 부당함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막을 수 있다. 성찰은 책임의 소재를 흐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몫을 사실에 따라 구분하고, 그중 자신의 몫부터 외면하지 않는 일이어야 한다.

(나)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윤동주, 「참회록」

(다)

한 지역의 익명 온라인 게시판에 새로 마련된 청소년 문화 공간의 운영이 불공정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운영자가 특정 학교 학생들에게만 이용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신청 기간과 이용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용자들은 작성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주장을 거리낌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다.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많은 추천을 받자 비슷한 비난 글도 잇따랐고, 일부 이용자는 운영자의 가족과 특정 학교 학생들까지 조롱하였다. 처음 글을 공유한 사람들은 자신은 단지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뒤늦게 공개된 안내문과 신청 기록을 통해 해당 공간이 모든 학교에 같은 절차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게시판 운영자는 허위 내용을 담은 글과 모욕적인 댓글을 삭제하고 정정 공지를 올렸다. 그러자 일부 이용자는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글을 추천하거나 퍼 나른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대신, 운영자가 정보를 늦게 공개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모욕적인 댓글을 쓴 사람도 최초 작성자가 자신을 속였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정정 공지를 읽고서도 게시물을 지우지 않은 이용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의심했으니 자신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이 과정에서 ㉠ 자신의 판단과 언행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잘못의 원인을 오직 다른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돌리는 태도가 널리 나타났다.

익명 공간은 신원이 드러날 때의 불이익을 줄여 권력이나 다수의 잘못을 고발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행위의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비슷한 의견이 추천을 많이 받으면 이용자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쉽게 확신하고, 잘못이 밝혀진 뒤에도 다수가 함께했다는 이유로 책임감을 덜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얻은 집단의 호응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주하지 않게 하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물론 운영 과정의 정보 공개가 충분했는지 비판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일은 필요하다. 문제는 그러한 비판이 자신의 허위 정보 유포나 모욕적 표현을 정당화한다고 여기는 데 있다. 운영자의 부족한 설명, 최초 작성자의 거짓 주장,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확산한 이용자의 행동은 각각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적인 비판은 자기 잘못을 가리는 수단으로 바뀌고, 게시판은 오류를 함께 바로잡는 공간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을 바꾸어 가며 책임을 피하는 공간이 된다.

* 단서(端緖) : 어떤 일이나 현상이 시작되는 실마리.
* 반구저기(反求諸己) :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 찾음.
* 자기혐오 :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함.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

2 600점

(나)를 바탕으로 (가)의 A, B, C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다)의 관점에서 (나)의 ㉠을 논하시오. **(700자±100자) [600점]**

(가)

<표> 연령별 인구 구조 지표의 변화

연도	A	B	C
2000년	29	10	34.5
2010년	23	15	65.2
2020년	18	22	122.2
2030년	16	34	212.5
2040년	17	53	311.8

※ 각 지표는 해당 연도의 연령별 인구 비율에 100을 곱하여 산출한 값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반올림하였다.

※ 가상의 자료임.

(나)

한 사회의 인구는 일반적으로 0~14세의 유소년 인구,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출생아 수가 오랫동안 감소하면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여기에 평균 수명의 연장과 과거 대규모 출생 집단의 고령층 진입이 겹치면 고령 인구의 비중은 높아진다. 주거와 양육·교육 비용, 불안정한 일자리, 일과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 등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출생이 지속되면 가임 연령 인구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더라도 출생아 수가 곧바로 크게 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파악할 때에는 연령 집단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활용된다.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유소년 인구의 수이고,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의 수이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의 수를 뜻한다. 출생아 수가 먼저 감소하는 시기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낮아져 생산연령인구의 부양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유소년 인구의 감소가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로 이어지고 고령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

부양비의 상승이 실제로 생산연령인구 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비용이 직접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고령자도 일하거나 세금을 낼 수 있고, 같은 연령층 안에서도 소득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동 공급, 소비와 저축, 재정 및 사회 보장 제도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고령 인구의 증가는 연금·의료·돌봄 수요를 늘린다. 반면 보육과 학교에 필요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 투자를 급격히 축소하면 아동 한 사람의 역량을 충분히 기르지 못해 미래의 생산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

특히 현재 일하는 사람이 낸 보험료나 세금으로 현재 노인의 급여를 충당하는 제도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세대 간 이전에 직접 영향을 준다.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와 조세만 올리면 청년과 중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급여를 일률적으로 줄이면 다른 소득원이 없는 노인의 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 재정 부족을 국채로 계속 메우면 현재의 부담 일부가 미래의 납세자에게 넘어간다. 그렇다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에만 치중하여 보육·교육, 청년의 고용 역량, 예방 의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장래 세대가 물려받을 인적·사회적 기반이 약해진다.

따라서 ㉠ 연금·의료·돌봄의 비용과 보육·교육·고용 역량을 위한 지출을 현재의 노인·청년·아동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사이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를 단순히 연령 집단 사이의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

이익 다툼으로만 보면 모든 청년을 부담자, 모든 노인을 수혜자로 간주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각 세대 내부의 소득 격차, 정책 변경을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 특정 세대가 평생 부담하고 누릴 혜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롤스는 사회의 기본 제도가 공정하려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미리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에서 그 원칙을 선택한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한지 가난한지, 어떤 능력과 가치관을 지녔는지뿐 아니라 어느 세대에 속할지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무지의 베일 뒤에서는 현재 세대라는 이유로 자원을 모두 소비하는 원칙도, 미래 세대의 이익을 명분으로 현재의 불리한 사람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원칙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롤스의 정의로운 저축 원칙은 각 세대가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성과를 이용하는 한편, 뒤이은 세대도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반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여기서 저축은 단순히 화폐를 쌓아 두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생산 시설과 재정적 자산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기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도 다음 세대에 전할 기반에 포함된다. 어느 세대도 앞 세대에 자신이 제공한 몫을 직접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모든 세대가 자신이 받은 기반을 보존하고 개선하여 다음 세대에 넘기는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면 세대 사이의 공정한 협력이 가능해진다.

정의로운 저축은 미래의 부를 끝없이 늘리기 위해 현재 세대의 기본적 필요를 억누르라는 요구가 아니다. 정의로운 제도를 세우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축적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기반이 마련된 뒤에는 축적의 속도보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 중요해진다. 특히 현재 세대 안에서도 가장 불리한 사람의 기본 생활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세대 간 정의와 세대 내 정의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특정 연도의 수입과 지출만이 아니라 각 세대가 평생 부담하고 누리는 효과, 다음 세대에 남길 제도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의 보험료와 급여를 충분한 예고 없이 한 연령층에만 불리하게 바꾸면 공정한 협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반면 변경 시기를 예고하고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와 조세를 조정하며 저소득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호한다면 부담을 더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 또한 빚을 내어 현재의 일시적 소비만 늘리는 것과, 보육·교육·예방 의료에 투자하여 미래 세대도 이용할 역량과 제도를 남기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공개하고 영향을 받는 여러 세대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역시 어느 세대에 속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방법이다.

* 생산연령인구 :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담당할 가능성이 큰 15~64세 인구.
* 세대 간 이전 : 한 세대가 낸 세금·보험료나 보유한 자원이 다른 세대의 급여와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
* 원초적 입장 : 자신의 사회적 조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고 가정한 상황.
* 무지의 베일 : 원칙을 선택할 때 자신의 계층·능력·세대 등 유불리를 알 수 없게 하는 가상적 조건.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

답안지 · 문제 1

400점 · 700자±100자(띄어쓰기 포함)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

답안지 · 문제 2

600점 · 700자±100자(띄어쓰기 포함)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

해설지

2027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논술고사 대비 모의고사 01회 (인문계열)

문제	배점	시험 시간	채점
2문제	**1000점**	**120분**	**사고력 5항목**

한눈에 보기

문제	식별 요소	답안의 핵심	배점
1	[A] 확충 [B] 방패	확충과 거울로 살펴본 온라인 책임 회피	400점
2	A 유소년 부양비 B 노년 부양비 C 노령화 지수	인구 구조 변화와 정의로운 세대 간 부담	600점

문제별 해설 · 채점 기준 · 예시 답안

1
400점
60분

교육과정 과목: 국어(문학, 독서), 도덕(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수오지심, 확충, 반구저기, 부끄러움, 자기 성찰, 책임 회피, 온라인 익명성

출제 의도: 맹자의 사단이 구체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과 반구저기의 성찰 방식을 이해하고, 온라인 익명 공간에서 집단의 호응이 자기 성찰을 막는 방패로 작용하는 양상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참회록」의 화자가 거울을 거듭 닦으며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에 비추어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수오지심을 도덕적 잘못을 감지하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반구저기가 그 마음을 자기 점검으로 이끄는 태도라면 '확충'은 이를 사과, 보상, 재발 방지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넓히는 과정임을 밝힌다. 제시문 (나)의 화자는 자신의 얼굴과 삶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내일이나 모레나' 다시 참회록을 쓸 일을 말하는 한편 밤마다 거울을 닦아 보자고 한다. 제시문 (다)는 익명 게시판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의 확산과 모욕적 표현에 가담하고도 집단의 호응을 '방패'로 삼아 자신의 책임을 타인과 운영자에게 돌리는 사례를 보여 준다.

발문의 첫 단계에서는 (가)의 '확충'과 (다)의 '방패'를 찾아 상자를 완성하고, 반구저기를 통한 자기 점검이 구체적인 책임 실천으로 확충되어야 하지만 집단의 호응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패가 되면 그러한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거울을 거듭 닦으며 자신의 삶과 고백을 계속 돌아보려는 (나) 화자의 태도에 비추어 ㉠을 논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추천, 공유, 댓글을 성찰하지 않으므로 게시물 삭제, 정정, 사과로 나아가지 못한다. 다만 운영자의 정보 공개 문제와 이용자의 허위 정보 확산 책임은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성찰을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기비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식별 요소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

[A] 확충 — (가)의 '반구저기는 그 움직임을 자기 점검으로 이끌고 확충은 그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넓히는 과정이다.'

[B] 방패 — (다)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얻은 집단의 호응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주하지 않게 하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채점 기준

평가 항목	기준	배점
사실적 사고력	- 제시문 (가)의 수오지심, 반구저기, 확충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있음. - 제시문 (나)의 화자가 거울을 거듭 닦으며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를 이해하고 있음.	50점
추론적 사고력	- 제시문 (가)에서 [A] '확충'을, 제시문 (다)에서 [B] '방패'를 정확히 찾고 두 단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 [A]와 [B]를 바탕으로 (나) 화자의 태도에 비추어 (다)의 ㉠이 자기 점검과 책임 있는 실천을 가로막는 태도임을 파악할 수 있음.	150점
비판적 사고력	- 익명성과 집단의 호응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 - 운영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이용자 자신의 책임 인정이 양립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 문제를 균형 있게 논할 수 있음.	100점
창의적 사고력	- 제시문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허위 정보의 추천·공유, 모욕적 댓글, 게시물 삭제와 정정 등 제시문 (다)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음.	50점
논리적 사고력	- 비문이 없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논리적이며 제시된 분량을 충족함 (700자±100자) - 문장과 단락 간의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러움.	50점

예시 답안

[A]는 '확충', [B]는 '방패'이다. (가)에서 반구저기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인을 자신에게 되돌려 찾아 자기 몫을 점검하는 태도이고, 확충은 그렇게 일어난 도덕적 마음을 사과·보상·재발 방지와 같은 구체적 실천으로 넓히는 과정이다. 그런데 (다)에서는 이용자들이 얻은 집단의 호응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주하지 않게 하는 방패가 된다. 따라서 자기 점검이 시작되기도 어렵고, 잘못을 바로잡는 확충에도 이를 수 없다.

(나)의 화자는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자신을 바라보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라고 삶을 되묻는다. 또한 '내일이나 모레나' 다시 참회록을 쓸 일을 말하며, 밤마다 거울을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고 한다. 이는 한 번의 고백으로 책임을 덮지 않고 부끄러움을 거듭 마주하려는 태도이다. 이에 비추어 ㉠은 자신의 판단과 언행을 살피지 않은 채 책임을 바깥으로 밀어 내는 성찰의 회피이다. 이용자들은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글을 추천·공유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썼으면서도 최초 작성자와 운영자, 다수에게 탓을 돌린다. 운영자의 늦은 정보 공개는 별도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용자의 허위 정보 확산과 모욕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각 책임을 사실에 따라 구분하고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정정하며 사과할 때, 부끄러움은 자기혐오에 머물지 않고 오류를 함께 바로잡는 실천으로 확충될 수 있다.

(691자)

2
600점
60분

교육과정 과목 통합사회, 사회·문화, 경제,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세대 간 정의, 정의로운 저축 원칙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

출제 의도 인구 구조 지표의 정의와 표의 수리적 관계를 결합하여 자료를 정확히 판별하는 능력을 확인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발생하는 세대별 부담과 혜택의 갈등을 롤스의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수험생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보존과 현재 세대 내부의 불리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세대 간 공정의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문항 해설

제시문 (가)는 명칭을 밝히지 않은 세 지표의 시계열 자료를 제시한다. 제시문 (나)는 유소년 부양비·노년 부양비·노령화 지수의 정의와 저출생·고령화가 사회 보장 및 세대 간 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을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배분 문제로 제시한다. 제시문 (다)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과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통해 현재 세대의 기본적 필요와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제도적 기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답안에서는 먼저 (나)의 정의를 (가)의 수치에 적용하여 A를 유소년 부양비, B를 노년 부양비, C를 노령화 지수로 판별해야 한다. 특히 C가 B를 A로 나눈 값의 100배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어 ㉠을 어느 한 세대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세대에 속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협력 원칙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부채나 청년층에 대한 급격한 부담 전가를 피하고, 연금의 점진적 조정과 보육·교육·예방 의료 투자 등을 통해 미래 세대가 이용할 역량과 제도를 남겨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식별 요소

A 유소년 부양비 (유소년부양비도 인정) — 제시문 (나)의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유소년 인구의 수'라는 정의와 (가)의 감소 추세.

B 노년 부양비 (노년부양비도 인정) — 제시문 (나)의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의 수'라는 정의와 (가)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C 노령화 지수 (노령화지수도 인정) — 제시문 (나)의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의 수'라는 정의와 (가)에서 C가 B를 A로 나눈 값의 100배에 해당하는 관계.

채점 기준

평가 항목	기준	배점
사실적 사고력	- 제시문 (나)의 세 인구 구조 지표의 정의와 저출생·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있음. - 제시문 (다)의 원초적 입장과 정의로운 저축 원칙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	50점
추론적 사고력	- 제시문 (나)의 정의와 제시문 (가)의 수치 및 변화 양상을 결합하여 A, B, C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음. - 제시문 (다)를 바탕으로 ㉠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 원칙의 문제임을 추론할 수 있음.	150점
비판적 사고력	- 특정 세대에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미래를 명분으로 현재의 취약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 -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세대 내부의 격차, 정책 변경의 예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할 수 있음.	200점
창의적 사고력	- 정의로운 저축 원칙을 연금·조세·국채 및 보육·교육·예방 의료 투자에 적용하여 세대 간 공정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 - 부담의 점진적 조정, 저소득층 보호, 장기 효과의 공개와 세대별 참여 등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주장할 수 있음.	150점
논리적 사고력	- 비문이 없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논리적이며 제시된 분량을 충족함 (700자±100자) - 문장과 단락 간의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러움.	50점

예시 답안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

A는 유소년 부양비, B는 노년 부양비, C는 노령화 지수이다. A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 수이고 B는 같은 인구에 대한 노인 수이다. C는 유소년 100명당 노인 수이므로, 표에서 C가 B를 A로 나눈 값의 100배와 거의 같고 A는 낮아지는 반면 B는 계속 높아지는 점도 이 판별을 뒷받침한다.

㉠은 어느 한 세대의 몫을 똑같이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어느 세대에 속할지 모르는 조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정하는 문제이다.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따르면 현재 세대는 앞 세대가 물려준 제도와 생산 기반을 이용하는 만큼 다음 세대가 정의로운 사회를 운영할 기반도 남겨야 한다. 따라서 국채로 일시적 급여만 늘리거나 청년에게 보험료를 급격히 전가하는 방식은 미래의 선택 가능성과 현재의 불리한 사람을 함께 해칠 수 있다. 반대로 재정 유지만을 이유로 빈곤한 노인의 연금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연금은 충분히 예고한 뒤 보험료와 급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저소득 노인의 최소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보육·교육, 청년의 고용 역량, 예방 의료에 투자하면 현재의 필요를 돌보면서 미래의 인적 기반과 재정 지속성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세대별 장기 효과를 공개하고 부담 능력을 고려한 안정적 규칙을 마련할 때 ㉠의 공정이 실현된다.

(664자)

Copyright © 2026, RuleMakers, All rights reserved.